

러 시 아

한 · 리 방산협력을 위한 정책대안

金 容 煥 *

1995년 9월 27일 서울국제군산산업전에 참가한 러시아측 방산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과 러시아는 군사장비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작업을 벌이고 러시아가 한국에 무기를 공급하는 등 군사협력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인테르팍스통신이 9월 26일 러시아의 국영무기수출회사인 로스 보오르제니에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이 향후 국제무기시장에 판매할 하이테크제품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계획이라고 밝히고 구체적으로 레이더기저용 안테나 시스템, 잠수함 동력시스템, 새로운 이동식 방공미사일 발사대 등을 공동개발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1995년 10월 16일 제5차 한·러과학기술공동위원회 회의에 의하면, 정부는 17일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유도장치 기술 등 15개 첨단군사기술을 이전받아 민수화하기로 러시아와 합의했다. 정근모 과기처장관은 보리스 살티코프 러시아 과기정책부장관과 가진 한·러과학기술 공동위원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기술이전시기 및 방법 결정을 위한 공동실무협의체를 올해안에 구성키로 했다. 이번에 이전키로 합의한 군수기술은 ICBM 유도장치기술, 미그29기 등 전투기 설계제작기술, 군사용 칩

보위성 촬영기술, 방공레이더 시스템 등 15종류이다.

이와 같이 1990년 양국간의 수교 이후 상당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 첨단핵심기술 및 핵심요소 기술교류를 위한 다각적인 과학기술교류 및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현상으로 1990년 12월 한·러과학기술협력협정체결에 의하여 정부는 1991년 2월 한·소과학기술협력센터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러시아 최고 강점인 민군수 첨단기술의 적극적 교류를 위한 사업과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 선진국 수준의 기술강대국으로 발전할 최선의 구체적 대안으로 간주되어, 한·러협력사업은 WTO 체제와의 국가경쟁력 확보와 동북아 경제기술분야의 중추적 기능수행 및 통일을 대비한 구체적 업무수행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러간 방산협력과 군사기술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코자 한다.

첫째, 러시아의 과도기적 상황과 한국의 실리외교와의 관계이다. 러시아의 외화획득원으로 '국방기술'이 고려된다는 것은 한국이 미국 일본도의 국제관계에서 상당한 융통성을 갖도

* KIST 한·러센터 선임연구원, 경제학 박사(Tel: 02-958-6321)

러 시 아

록 한다고 하겠다. 미국이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방산기술을 러시아로 부터 쉽게 획득할 수 있으며, 현재 배치된 미국産 무기의 자력적 개량과 개선을 가능케 하여 향후 독자적인 무기개발의 시급성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첨단군수기술의 조기획득으로 경쟁력 있는 방산국가로써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하겠다. 이는 미국제공의 군수품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미국을 자극하여 보다 많은 기술이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정적국가'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상당부분의 기술원천국으로 러시아를 대해야 할 것이다. 정책입안시 지금까지는 러시아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서방우호국과 함께 러시아라는 변수를 함께 감안한 정책을 입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1995년 가서명한 한·러간 방산협력양해각서와 군사비밀 보호협정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기관의 업무조정과 협조를 위한 조직적인 메카니즘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방부내의 대러시아 업무 조정 및 권한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對러 메카니즘이 필요하다. 아울러 형식적인 업무협조가 아닌 관련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군사기술협력 메커니즘에 관한 제안이다. 한국측이 러시아의 무기체제와 군사기술의 주요 특성을 거의 모른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선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관심도를 고조시키며, 관련 분야 전문가의 러시아 파견 및 러시아 전문가의 초빙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전문가 유치, 파견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야 하며, 초창기에는 비

공식적인 방문, 유치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러시아 사정상 민간인 신분의 접촉이 매우 유리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전문가의 직접적인 접근방식에 의하여 신속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며, 對美협력과 같은 시스템 기술협력방식을 지양하고 요소 핵심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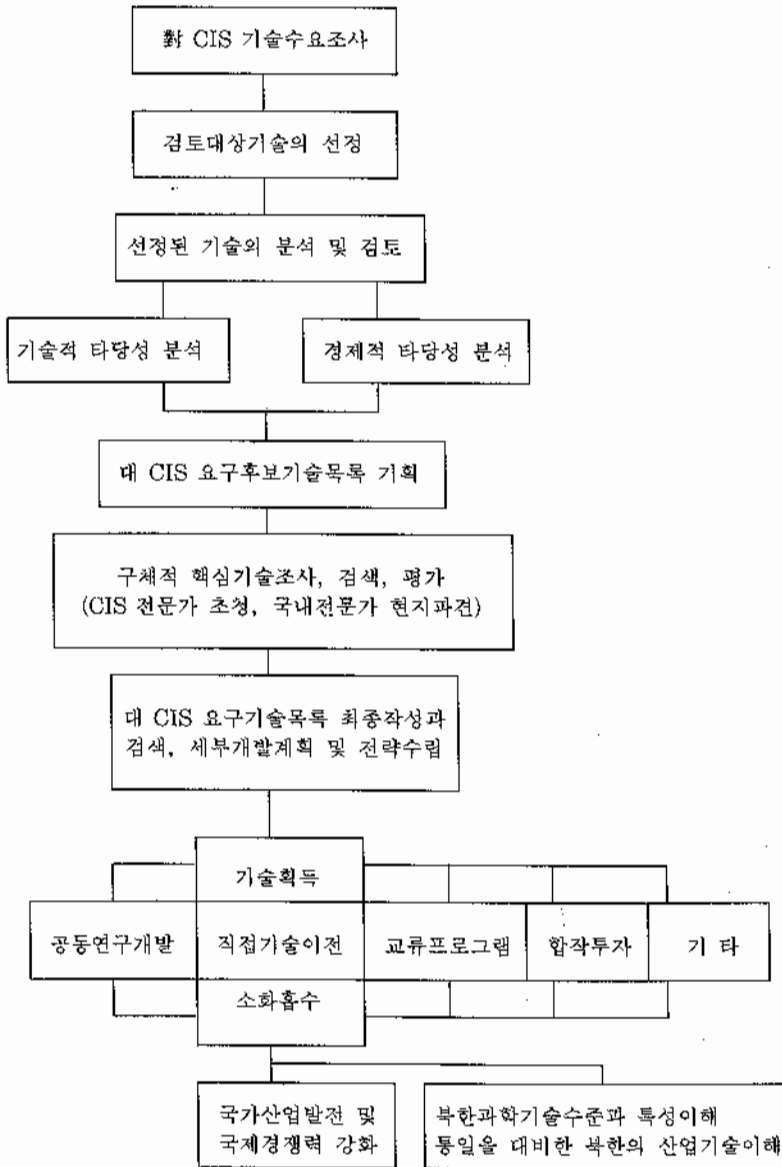
러시아측이 내세우는 관련 기관은 현재 대표적인 것이 1994년 설립된 로스보르제니아社인데, 이를 통한 사업추진시에는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되며 가격도 미국에 못지 않는 高價이다. 특히 러시아 정부 내부에서 그 위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MAPO를 비롯한 거대 방산기업들이 독자적인 방산협력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로스보르제니아社를 통한 사업들은 이중적인 시간과 비용이 허비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러시아의 과도기적 상황을 감안하여, 러시아 전문가의 유치확대와 장기유치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측이 로스보르제니아社를 직접 통하지 않고 국방성이나 정부채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협상을 유지하거나 혹은 러시아 실질 관련 기관이 러시아내의 협상을 모두 맡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측이 증계회사인 로스보르제니아를 직접 통하지 않고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사업 미진척시 러시아측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유치 및 파견에 의하여 러시아 무기체제 및 기술의 주요 특성과 협력가능성이 타진되면, 국내수요기술과 관련하여 그 기술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세부적 검색작업으로 우리 군장비에 응용, 비교할 수 있는 세부 사양조건을 확인하는 것이다.

러 시 아

따라서 현실적으로 협력가능한 대러기술수요를 정확히 선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이 선행되고 난 이후에는 구체적인 기술개발 및 협력사업을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는 기초 첨단분야에서 군사기술 강국인 CIS의 연구기관 및 과학자와의 적극적 지속적인 교류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첨단군수기술의 조기 국내도입을 성사시키게 될 것이



<그림> 對 CIS 방산기술 협력수진 체계

러 시 아

다. 특히 CIS의 경제난국과 과도기적 시장경제 운영으로 야기된 심각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첨단군수기술의 해외이전 및 군수산업의 민영화 추진기회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실천 메커니즘은 국방 및 민수겸용 CIS 첨단핵심기술의 국내조기 도입을 통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CIS로부터 첨단군수요소 핵심기술의 조기획득으로 현 방산업체 및 관련기관이 겪고 있는 애로기술을 극복하게 하는 대안이 되며, 향후 첨단군사기술의 국산화와 자주 국방기술체계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이와 같은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대러 사업을 추진키 위한 실무사업팀을 범부처형으로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러 실무사업팀을 비상임 형태로 구성하여, 긴급시 발생하는 러시아 사업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체계적인 대러 방산협력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주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는 국내에 몇

안되는 러시아 전문가들의 힘을 응집시키고, 장기적인 대러 관계발전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CIS 즉 러시아가 한반도에 미치는 역학적 영향에 관한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상당한 교류가 있어 왔으며, 근세에 들어 북한에 대한 구소련의 위성통치가 이루어졌다. 북한산업구조 및 군수체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분야에 구소련의 영향이 지대하였다. 예를 들면 북한의 유도무기 개발품인 노동1호 등도 구소련의 스킨드미사일 개량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방산협력은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에 상당한 의미를 시사한다 하겠다. 러시아 방산구조와 방산기술의 이해와 협력은 평화적 한반도 통일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대안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실천 메커니즘으로 한 러방산기술협력사업을 이해해야 하며,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